

한국 민주화운동에서 민족모순과 계급모순 논쟁

韩相元 (충북대학교 철학과)

1. 들어가며

1980년대 군부독재정권 치하에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학생운동 세력이나 재야 지식인들은 운동노선과 한국사회의 성격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인다. 특히 외세에 의한 남북의 분단 문제가 한반도의 가장 근본적인 모순이라고 주장하는 민족해방(NL) 노선과, 남한의 자본주의적 계급모순이 한국 사회의 근본 모순임을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PD) 노선 사이의 갈등은 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 이후 지금까지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컨대 80년대 민족해방 세력의 사상적 흐름은 촛불집회 이후 새롭게 등장한 현 정권이 추구하는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정책의 사상적 기원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 노동조합운동이나 여러 사회운동 속에 여전히 NL과 PD 사이의 논쟁 혹은 경쟁적 공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사상의 흐름은 현대 한국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2. 5·18 광주항쟁과 그 이후 80년대 민주화 운동

1979년 10월 26일 18년간 군부 장기독재를 실시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다. 많은 사람들은 독재정치의 종식과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 직후인 12월 12일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또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 다시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를 묵과할 수 없었던 정치인들과 학생들은 1980년 초부터 신군부의 퇴진과 민주화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를 '서울의 봄'이라 부른다.

이에 대응하며 신군부 세력은 5월 17일에 전국에 계엄령을 실시했다. 이튿날인 5월 18일 광주에서 대학생과 시민들이 계엄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자, 공수부대로 구성된 계엄군을 투입해 대대적이고 잔인한 진압작전을 개시했다. 그러나 이는 광주 시민들의 전면적인 분노를 낳았고, 이제 시위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광주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거대한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던 계엄군은 5월 21일 시위대에게 발표하였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분노한 광주 시민들은 경찰서와 예비군의 무기고를 습격해 스스로 무장하였다. 시민군의 무장에 당황한 계엄군은 잠시 후퇴했으나, 결국 병력을 보강한 뒤 다시금 광주 시내로 들어가 시민군을 진압했다. 5월 27일 새벽에 전남도청에서 농성 중이던 시민군에 대한 최종적 진압 작전은 학살 속에 막을 내렸다.

8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은 이러한 광주에서 일어난 항쟁과 학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운동에서 출발해,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 결국 87년 6월 29일 신군부 세력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발표했고, 그 해 12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이 민주화운동을 거치며 특히 이 운동의 가장 핵심적 세력이었던 학생운동 진영은 크게 두 갈래의 이념적 분화를 겪는다. 이러한 노선 논쟁은 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어 1987년 직선제 개헌 투쟁 전후를 거치며 더욱 활성화되었고, 특히 1988년부터 1991년까지 한국의 학생사회

뿐만 아니라 전체 지식인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자 격렬한 논쟁을 형성한다. 이후 1990년대 이후에 이러한 논쟁은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사회의 정치계와 사회운동 진영에서는 이러한 노선의 차이와 논쟁의 영향력을 찾아볼 수 있다.

이미 1960년대부터 한국의 운동세력이 암묵적으로 공유해왔던 이념은 ‘삼민(三民)’으로, 이 이념은 1970년대 박정희 군부독재 반대 운동에서 명맥을 유지해오다,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의 초기 기본적인 지표를 형성했다. 이러한 이념의 영향은 1985년 출범한 민주화운동 단체 ‘삼민투위(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을 위한 투쟁위원회)’라는 명칭에서도 드러난다. 여기서 ‘삼민’은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이라는 세 개의 구호로 정식화되고 있다.

1980년대 민주화 세력의 논쟁은 이러한 삼민 이념의 영향 속에 출발하였다. 당시 운동권 내부에 존재했던 ‘CDR(Civil Democratic Revolution, 시민민주주의혁명론)’, ‘NDR(National Democratic Revolution, 민족민주혁명론)’, ‘PDR(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인민민주주의혁명론)’은 각각 삼민의 어느 특정한 요소들을 자신의 주된 이념적 근거로 삼고 있다.

이중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논쟁지점은 학생운동 급진세력 사이에 벌어진 NDR와 PDR 사이의 논쟁지점이다. NL 혁명론은 ‘식민지반봉건사회론’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수용하면서 ‘식민지반자본주의론’으로 나아갔다. 다른 한편 PD론은 ‘맑스-레닌주의’를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식민지 민족모순보다 남한 내 계급모순을 중시하는 입장을 보였다.

3.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이념적 분화

그렇다면 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NL과 PD의 분기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살펴볼 것은 1980년 신군부의 등장 직후 벌어진 무림-학림 논쟁이다. 무림과 학림은 모두 경찰이 학생운동 세력에 붙인 이름이다. 신군부의 대학 휴교 조치가 끝나고 80년 9월 학기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서울의 봄과 광주에서의 학살을 겪은 학생들은 전두환 신군부에 대한 항전을 외쳤다. 서울대생들은 12월 11일 시위를 감행했다. 전두환 정권은 이 때 작성된 <반파쇼학우투쟁 선언문>이 민주질서를 부정하고 좌경화했다고 공격하며, 선언문 작성자들을 연행한다. 나아가 정권은 고문과 협박, 회유로 서울대 전체 학회 현황과 구성원 명단까지 샅샅이 찾아내, 결국 9명을 구속하고 90여 명을 강제로 군대에 입영시켰다. 경찰은 서울대 학생운동 조직을 ‘안개 속의 학생 조직, 무림’이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서울대 학생운동 조직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81년 봄 대대적인 학생 시위가 발생하자 당국은 6월 초부터 학생 활동가들에 대한 발본색원에 나섰다. 대대적인 구속과 혹독한 고문이 이어졌다. 특히 학생운동 조직의 중심에는 ‘전국민주학생연맹’이 있었다. 경찰은 이 조직을 ‘학생들의 조직, 학림’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루 학생운동 진영에서 ‘무림’은 장기적 관점에서 민주변혁 투쟁의 주력군인 학생운동의 내부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역량강화론을 내세운다. 반면 ‘학림’은 이러한 무림의 관점을 수세적 조직보존론으로 비판하면서, 학생운동이 정치투쟁에서 전위적 역할을 수

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논쟁은 이후 1984년의 MC-MT 논쟁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MC는 Main Current의 줄임말이며, MT는 민투(민주화투쟁위원회)의 영어식 표기를 말한다.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MC는 무림을, MT는 학림을 이어받은 계파를 말한다. MC는 현재적 정세에서 적극적 혁명전술을 시기상조로 규정하고, 변혁운동의 주체 역량이 미약한 시기인 현재 조건에서는 대중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한국사회를 미제국주의의 신식민지로 규정하면서 반제국주의 투쟁을 강조하였다. 반면 학림 출신자들이 모여 결성한 민주화추진위원회(이하 민추위)는 한국 자본주의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로 규정, 레닌주의 혁명이론에 영향을 받은 혁명전술을 제창하였다. 또 MC그룹은 과 학회, 서클 등 학생사회에서의 대중적 의식화와 조직활동을 중시한 반면, 레닌주의에 영향을 받은 MT파는 선진적 대중의 선도적 활동을 중시하게 되었다.

즉 MC와 MT 각 그룹은 자신들의 입장을 발전시켜나가면서 이를 정파 조직적 실천으로 이어 나갔다. MC그룹은 대중노선을 확립하고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을 받아들여 민족해방(NL) 그룹으로, MT 그룹은 제헌의회소집투쟁론을 주장하면서 제헌의회 그룹(CA)으로 각각 발전되어 나갔다. 이제 논쟁의 구도는 NL그룹과 CA그룹 사이의 논쟁으로 불리게 된다. 1987년 6월 항쟁 전후에 이들은 서로 다른 노선을 걷는다. NL그룹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했으며, CA그룹은 제헌의회 소집을 주장하면서 민주화운동 노선을 둘러싼 이견을 표출했다.

이제 한국 사회를 ‘미제와 미제의 앞잡이에 의해 파쇼적으로 지배당하는 사회’로 정의내리는 NL은 미제와 함께,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체제인 신군부 파쇼체제를 제거함으로써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이들은 반미자주화 투쟁과 반파쇼민주화 투쟁을 강조하였다. 반면 CA는 반제반파쇼 투쟁을 통해 미제 축출, 군부 타도, 독점자본 해체를 이루어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이 두 경향은 모두 미 제국주의 축출, 군부 타도, 국내 독점자본 해체를 강조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 사회 민주화를 반제, 반자본 투쟁의 이념으로 급진적으로 이해하였다. 다만 그 방법상으로 NL은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을 강조하면서 민족주의적 경향을 굳혀갔고, CA는 반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을 내세우며 계급투쟁에 대한 강조를 발전시켰다. CA는 1987년 이후 더 이상 ‘제헌의회’ 구성이 쟁점이 되지 못하자 PD라는 노선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두 경향들은 어떤 투쟁 대상을 설정하는가? NL의 경우에는 미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을 CA는 국내 독점자본에 대한 투쟁을 강조한다. 양자 모두 미 제국주의, 군부, 국내 독점자본을 모두 타도대상이라 보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강조점이나 혁명전략의 순서가 일치하지 않았다.

오늘날 NL과 (CA의 후신인) PD계열을 놓고, ‘NL’하면 민족해방을 추구하며 통일운동을 중심에 놓는 운동세력으로, ‘PD’는 노동해방을 추구하며 노동운동과 계급투쟁을 중시하는 운동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엄밀한 구분은 아니다. 물론 ‘NL/PD’는 ‘민족해방(National Liberation)’과 ‘인민(민중)민주주의(People’s Democracy)’라는 말의 약자이지만 NL/PD의 변혁론은 본래 NL도 PD도 아닌 ‘NLPDR’, 즉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론으로, 이는 NL과 PD가 모두 받

아들이는 것이었다. 즉 그들은 모두다 당시 한국사회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수립이라는 과제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차이는 적지 않았다. NL과 PD 모두 미 제국주의에 반대했지만, NL은 한국 사회에 필요한 투쟁 방향의 관건이 '반봉건'에 있다고 보았고, 반면 PD에게 중요한 쟁점은 '반독점' 혁명이었다. 또 NL은 '정권의 소유관계'가 '생산수단의 소유형태'보다 더 중요하다는 견해를 내세우면서 남한의 종속성을 미제국주의에 의한 '정치군사적' 지배로 이해했다면, PD는 남한 신식민지를 '경제적' 종속으로 정식화했다. 이러한 견해차이는 어디에서 비롯하는가? NL은 미국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적 지배가 남한 사회에서 '봉건성'을 잔존시키는 '절반의 봉건적 사회'로의 퇴행을 낳았다는 문제의식을 가졌던 반면, PD는 제국주의에 의한 경제적 지배가 '국가독점자본주의'를 만들었다고 보았다. 결국 NL이 주장한 혁명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적 혁명이면서 동시에 봉건적 유제를 청산하는 '부르주아혁명'이었다. 반면 PD가 주장하는 혁명은 제국주의와 동시에 독점자본을 극복하는 '사회주의혁명'의 요소를 갖고 있었다.

이같은 구도에서, NL과 PD는 각각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강조하는 정파로 발전해나간다. 그런데 이러한 구도 속에서 양 정파가 갖는 한계도 드러난다. NL은 남한 사회의 '종속성'을 정치군사적 지배라는 관점으로 환원하면서, '분단극복의 과제'를 민족주의적 방식의 '반미투쟁'으로 일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반면 PD는 자본주의 경제 모순에 대한 경제주의적 환원 속에서, 계급해방 분단극복이라는 두 과제를 사실상 분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현실 속에서 자본주의적 축적과 독점의 형성과정이 제국주의 세계체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두 정파 모두 자신들의 일면적 관점을 극복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80년대 후반부터 NL과 PD 역시 다양한 정파들로 분열되어 나간다. 이를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PD계열로부터 분화된 ND(민족민주주의) 노선의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은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노맹은 당시 한국사회 운동권이 NL, PD, ND 등 세가지 노선으로 정립됐다고 주장하였다.

대학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대중적인 활동을 벌인 NL은 북한의 '주체사상'의 원리와 수령론의 관점에 따라 대중노선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전위정당을 만들려 하지 않았다. 반면 여러 개의 조직으로 분열된 PD는 전위정당을 만들고자 했지만 역량 부족을 겪고 있었다. 반면 ND계열은 자신들만의 전위조직을 가질 능력과 조직,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노맹은 1988년 준비위원회 결성을 시작으로 점차 활동범위를 넓혀갔으며, 1989년 11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사노맹 출범 선언문'이 배포되면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안기부는 사노맹의 조직원이 한때 3000명에 이르기도 했으며 '남로당 이후 최대 조직'이라고 밝혔다. 결국 사노맹은 정부당국의 탄압으로 해체되었다.

4. 오늘날의 영향

2016-2017년 촛불시위 이후 등장한 현재 문제인 정부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정치인들 중 다수는 80년대 학생운동의 한복판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상호 전 여당 원내대표, 이인영 현 여당 원내대표 등은 대표적인 NL 계열

학생운동권의 걸출한 활동가들이었다. 반면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하다 최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최근 수개월간 한국에서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조국은 PD계열에서 독립한 사노맹의 구성원이었다. 조 장관은 1993년 울산대 교수로 근무할 당시, 사노맹 산하 연구기관인 '사회주의 과학원'에 소속으로 활동한 혐의로 검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조 장관의 사회주의 활동 경력을 이유로, 그가 정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을 가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현재 청와대는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압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분단체제 극복과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동시에 일본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해서 민족주의적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난다.

어찌됐거나, 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NL과 PD계열의 논쟁은 이처럼 현재 한국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 현 정부가 학생운동권 출신 인사들로 이뤄져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한국에 존재하는 진보정당들도 NL과 PD계열의 노선차이에 따라 서로 각기 다른 당으로 조직화되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운동 단체들 속에서 여전히 NL과 PD계열 출신의 활동가들이 서로 경쟁하며 활동하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역동적인 민주화 운동을 통해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시민 스스로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는 역사적 사실과 관련이 있다. 그 사이에 벌어진 논쟁들은 학생운동권 내에서 격한 분열을 낳기도 했지만, 그러한 논쟁은 현대 한국사회를 어떻게 이해하며 어떤 변혁이론이 필요한가를 둘러싸고 벌어진 불가피한 과정이었다. 특히 제국주의와 신식민지 간의 민족모순과, 독점자본 대 민중 사이의 계급모순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물음은 남북 화해협력과 함께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오늘날의 한국사회에서도 중요한 쟁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논쟁에서 드러나는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방식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성을 갖는다 하겠다.

참고문헌

- 고원, 「운동의 혁명적 개조와 이념의 퇴행성, 이중성의 딜레마 - 민중민주(PD)파 학생운동의 집합적 특성 연구」, 『기억과 전망』 29호, 2013, pp.97-136.
- 김주호, 「자본주의 비판과 민주주의 요구의 결합 - 1980년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11호, 2016, pp.205-236.
- 박영균, 「한국사회변혁이론과 민주 - 통일 변혁론의 재정립」, 『통일인문학』 72집, 2017, pp. 71-99.
- 이수인, 「1980년대 학생운동의 민족주의 담론」, 『기억과 전망』 18호, 2008, pp.98-130.